

충청지역 기초지자체 특화발전 활성화 워크숍 결과

□ 개요

- 일 시 : 2012. 6. 12(화) 14:00~6.13(수) 13:00
- 장 소 : 충북 괴산군청 별관 3층 대회의실
- 주최/주관: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, 충청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
- 후 원 : 국토해양부, 충청남도, 충청북도, 괴산군, 충남발전연구원, 충북발전연구원, 국토연구원, 한국생산성본부
- 참석인원 : 60여명(단장, 발제·토론자, 지자체 관계자 등)

□ 진행순서 및 내용

- 개 회 식
 - 개 회 사 : 김화진 (충청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사무총장)
 - 환 영 사 : 임각수 (괴산군수)
- 주제발표 : 3건
 - 기초지자체 특화발전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(이왕건/국토연구원)
 - 특화발전정책 개요(장성화/지역발전위원회)
 - 농어업 6차산업화에 의한 지역특화발전전략(유학열/충남발전연구원)
- 특화사례 발표 : 3건
 - 갈은권역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(산막이옛길 등), 우종진/괴산군 과장)
 - 흥성한우브랜드사업(김동우/흥성축협 지도과장)
 - 임실치즈특화발전사례(김명진/임실치즈과학연구소 계장)
- 지정토론(5명/ 지역위 1, 교수 2, 전문가 2) 및 질의 응답

□ 주요 토론내용

○ 원광희 (좌장 / 충북발전연구원 기획실장)

- 주제발표나 사례가 해당 지자체에 어떻게 전파될 것인가, 어떻게 활용될 것인가에 대한 조언을 중심으로 토론 요청
- 포괄보조금 제도의 추진과 함께 5개년 계획이 수립되면서,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도 부족해지고 사업에 대한 참여 독려도 어렵게 되는 구조로 바뀌어서 개선이 필요함
- 2018년 부터는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인구감소가 시작될 것으로 예측되며 이에 따른 도시규모의 축소가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그 대안으로 베이비부머 유치를 중심으로 많은 논의와 고민이 이루어지고 있음
- 신규마을(전원마을 등) 조성의 문제 : 농산촌 지역에 주거지를 형성하면서 도시적 생활과 농촌지역 생활의 부조화 문제 야기하였고 이에따라 폐촌마을을 활용한 거점정비 사업의 추진이 필요
- 상향식 사업의 장점 : 지속적으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리더를 육성할 수 있음. 부작용으로는 리더의 독단으로 인한 지역 내 갈등 야기
- 농림부에서 주관하는 수많은 사업들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직제(농촌계획직 등)의 창설이 필요하다

○ 장인식 (우송정보대학 교수)

- 관광을 중심으로 토론하겠음. 성공을 위해서는 열정이 필요하며, 和而不同으로 토론 내용을 요약할 수 있음
- 최근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연계협력이나 상생 관련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갑자기 6차산업 육성을 추진하게 되면 후발 주자(시군)들이 접근하기에는 벅찬 감이 있음
- 따라서, 기존에 지역위에서 추진하는 연계협력이나 상생과 특화발전이 같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해서 연계협력이나 상생이 필요한 시군도 있고 특화발전이 필요한 시군도 있기 때문에 중앙 정부에서 이런 것들이 시군에 잘 전달 될 수 있도록 축(방향, 가이드라인)을 제시해 주기 바람
- 특히, 후발 지역(시군)들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배려와

지원이 필요함

- 관광협회 등에서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만, 지자체에서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인력이나 실천할 역량·계획이 없어서 연결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. 이것은 기획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

○ 이오석 (영동대학교 교수)

- 영동 지역은 경쟁력있는 농특산물이 없고, 문화자원으로서 (연)이 있어 이것을 관광상화 하기 위한 력을 많이 으나 한계
- 2005~2010년지 포도를 중심으로 하는 러터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현는 와인리아에서 연 40원의 소을 창고 , 현 농가형 와이리 육성사업을 추진하여 46개 농가에서 가를 하여 사업중 으로 이중 연 1대의 을 리는 농가가 3~4개 이고 한 농가에서는 도시에 있 자들이 유하여 와인제조업에 사하고 있음
- 10년 의 산업구조가 어떻게 바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할 시기 . 베이비부머 대의 직과 연계하여 이들의 후대비에 대한 방안으로 농을 통한 로운 일자리창 지원 대 마련이 필요
- 베이비부머 중에서는 은 후 춘 , 농을 토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특히, 대도시 주지역에서는 베이비부머의 춘 농에 관련 수요가 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대 마련이 시함
- 전문적인 농촌보다는 고향이나 지인들이 있는 지역에 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토가 필요함

○ 김정섭 (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)

- 특화의 의는 - 들이 하지 는 다른 것 . 다른 사람들과 경쟁을 하자는 것이 아라 다른 것을 만들어서 경쟁을 피하는 전략이라 할 수 있음(예:절배추 , 치즈)
- 지역발전에 있어서 특화사업의 육성은 주류가 될 수 없음. 그러나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경쟁이 없는 독자적 영역을 개척기 때문에 성과가 크게 나타나는 것이며, 특화되지 못하는 일반 사업들은 결 가격으로 경쟁해야 함

- 그러나, 특화사업의 가장 큰 애로점은 항상 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. 예를 들어 제주도 레길이 유명해지자 전적으로 길 조성이 유행하게 됨. 여기서 경쟁에 이기려면 결 끝없이 화를 추구해야 함
- 여기에서 필요한 것이 기업가 정신으로서, 계속 화를 추구하고 로운 인력을 육성하는 등의 비즈적인 마인드가 필요함. 지역에서도 전문가들과 함께 계속 고민하고 화를 위한 시도를 해야 발전하고 성공할 수 있음
- 2000년대부터는 정부의 지침에서 기획과 혁신을 요구하기 시작고 여기에 제대로 적응한 자치단체는 성공한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음
- 특화발전에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'자발성' . , 실제 주체인 민간 주체들이 로 움직일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한 력을 지자체와 중앙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정을 만들어야 함
- 신활력사업 등 기존의 특화발전 관련 사업들의 가장 큰 의는 지역에서 자발적인 기획과 고민을 할 수 있는 기풍을 조성으나 , 최근의 정 (포괄보조금)은 이런 기을 찾아볼 수 없음.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적 개선을 고민해주기 바람

○ **신광호 (성장기반과장)**

- 특화사업의 개념은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원 중에서 다른지역과 차별화 되면서 지역의 먹거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음
- 기존에 신활력사업을 통한 특화사업 추진에 성공한 사업과 실패한 사업을 비교해 보면 신활력사업 등 정부의 지원정과 함께 지역에서 자발적인 력을 통해 사업의 추진을 도모하면서 오랜 기간동안 지속성을 가진 사업들은 성공한 사례로 소개되고 있음
- 실패한 사업들은 대체적으로 신활력사업 등 정부 지원이 료 이후 지역에서의 자발적인 투자나 력이 사라지면서 사업 자체도 동력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음
- 지역위의 특화발전 활성화 추진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반성에서 발한 것으로,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특화발전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기본적인 목적
- 중앙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역에서의 자발적인

력을 중심으로 한 사업추진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, 포괄보조금 제도의 개선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력할 예정

- 영 셰필드의 사례를 보면 기존에는 철강 중심의 도시였으나 현는 도시생으로 유명한 도시로 소개되고 있음. 그 이유는 사업의 규모는 작지만 지역의 자발적인 력과 창조적인 발상(문화적 요소)을 통해 성공할 수 있었음
- 특화발전의 중요한 요소의 하나는 브랜드 . 기존에 지자체에서 브랜드 육성을 추진으나 대부분 제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함 . 그 원인은 충분한 고민과 력이 없었기 때문으로 판단됨
- 오늘 제시 의견을 반영해서 특화발전 정 방향을 명확히 하겠음

○ 단장님 마무리 말씀

- 워크숍 개최에 협조해 주신 괴산군 및 충청권 광역위와 참석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, 산막이 옛길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통해 활력을 찾기 위해 력하고 있는 것을 보 우 기쁨
 - 지역발전위원회에서는 현 상생발전, 특화발전의 두가지 트랙으로 정을 추진하고 있음
 - 자발적인 력의 필요성에 대해 우 공감함. 특화발전을 비롯한 모든 지역발전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지역의 자발성이며, 중앙정부는 여기에 약간의 지원을 더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구조
 - 기초지자체의 특화발전에 관련 현행 정 구조는 자발성 측면에서 기존의 정에 비해 많이 위축 것이 사실이며 개선될 필요가 있음
- ※ 포괄보조금 제도의 한계와 과제에 대해 설명 : 당초의 취지, 개별사업체계 환원, 사업별 지침, 부처별 자체 평가 등
- 제도개선을 위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으나 대규모 제도 개편은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될 우려가 있어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 . 그러나 근본적으로 지자체의 자발성 제고를 위해서는 력하겠음









